

與 “법인세 3% 준한 인하” vs 野 “1% 인하 중재안 받아라”

주호영 “법인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만 의견 못 좁혀” 접근 박홍근 “남은 쟁점 많이 좁혀져...의장 중재안 쟁점은 협의 이어가야”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예산안 처리 하루 전날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어 여야 모두 압박을 받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간 회의에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간 고위당정협의회 등이 이어지면서 예산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최종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1시간 가량 이어진 협상에도 의장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오후 재회동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채 필요하면 전화 협의 또는 대면 회동을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 추 부총리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의장께서 내신 중재안 사항 외에도 정리 안 된 게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아직도 의견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 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3%p 인하는 아니면 못 받겠다는 입장이나 질문에 ‘구체적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타결될 때까지는 양당이 구체적 내용은 말 안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만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위 당정에서 예산안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고위 당정이 이 부분까지 논의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오늘은 공개 당정이어서 몇 가지 공개 발언하고 할 텐데 아마 논의는 있을 걸로 예상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예상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어제 한 4~5시간 만나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도 1시간가량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그간 남은 쟁점에 관련해서 많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이 공식적으

로 아직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건 아니라 저희로서는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고, 조금만 더 저희가 협의를 이어나가는 걸로 생각해 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앞서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미합의 쟁점 일괄 타결을 주장하며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는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기능과 정통성을 부정당한 것이라는 반발이 존재한다.

최이슬기자

서영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관련 “尹대통령, 소환 수사 지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소환하고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해 소환하라고 지시하라”라고 했다.

서 의원은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만원

을 구형했다.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수많은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혐의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인사 중에 유일한 단 한 사람,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공범과의 대화에서 이 사건에 강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서 압수된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의 증권계좌 주식현황이 정리되어 있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다면 당장 구속되고도 남을 혐의”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 인사와 야당 대표에 대한 물증없는 압수수색과 피의사실공표로 망신주기를 자행하고 있지만, 윤해관과 김해관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라. 당장 수사하라고 명령하라”라고 덧붙였다.

오유나기자

한 총리 “경제회복·민생안정 위해 예산안 조속히 처리”

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예산안 처리 시한 넘겨 매우 안타까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

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함참 넘긴 상황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요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

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개혁을 국회와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중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중·고등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부담이 되어온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도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